

갈라파고스 규제에 길 잃은 숙박공유... 활성화 입법 시급

〈불합리하거나 불편하여 개선되어야 할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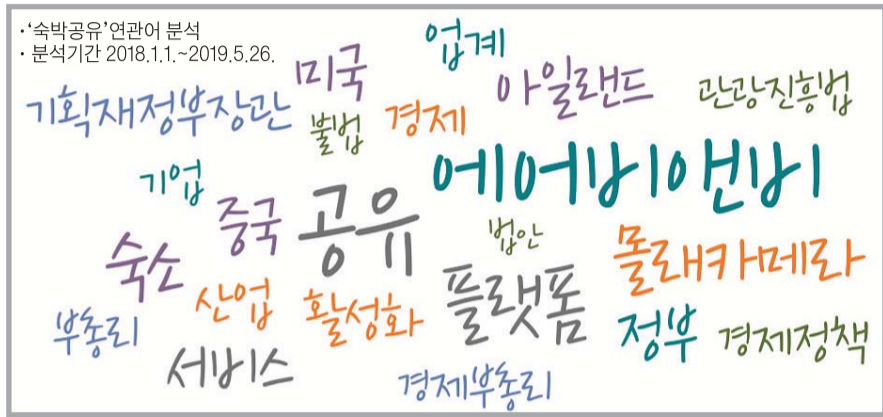
불법 시설운영 24명 형사입건
17일부터 업체 1천곳 실태점검
관련규정 없어... 입법 마련해야

불법 숙박공유는 막고, 서비스 운영 체제(플랫폼)는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정비로 '착한 공유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 외국인만 묵을 수 있다.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추진안을 무시하듯 불법 숙박공유는 벌써부터 난립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Argos(bigdata.nanet.go.kr)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실제 서울시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24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당시 "숙박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업체를 검증 없이 게재해 문제"라고 지적하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제2도

시로 꼽히는 부산에서도 지난해 불법숙박업 적발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불법 숙박공유가 판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부터 등록·미등록 공유숙박업체 100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체부는 이미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감시해 위반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도 새로운 형태의 호스트를 통한 숙박공유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숙박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 공유숙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당 법안만 두고 조항·해석하고 이에 따라 규율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숙박공유 관련 법을 '주택숙박사업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호스트의 양태를 주택숙박사업자·주택숙박관리업자·주택숙박중개업자로 나눠 각 장마다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사업자로서의 업무사항과 국가로부터의 감독, 업무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는 지난 2014년 10월 단기임대업 등을 허용하는 일명 '에어비앤비법'으로 불리는 조례를 가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08년 8월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곳이다.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국회도서관은 '숙박공유 서비스 법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부합한 숙박공유 관련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이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은 "숙박공유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면서도 "기존 숙박업·임대주택시장 참여자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출현으로 '디지털 개인 거러(P2P)'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창덕궁 모내기 행사
13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등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수 늘었지만... 지역·연령별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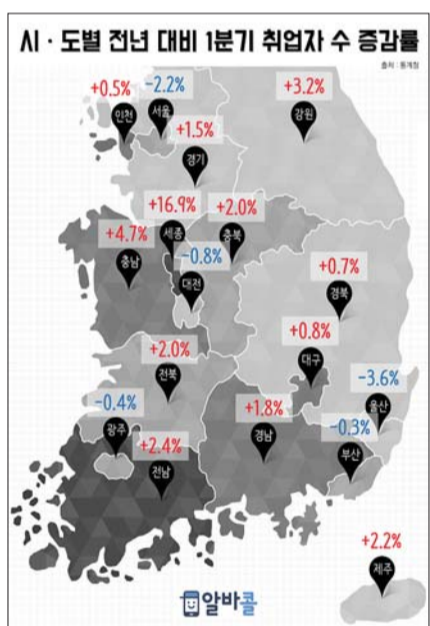
1분기 경제활동 인구조사

세종 16.9% 늘고, 서울 2.2% 줄어
50대 이상 증가하고 30~40대는 ↓

올해 1분기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지역·연령대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30~40대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13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통계청의 17개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총 17만8000명, 비율로는 0.7% 증가했다. 하지만 시도별 취업자수 증감률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6.9% 늘며 가장 높았다. 이어 ▲'충청남도' (4.7%) ▲'강원도' (3.2%) ▲'전라남도' (2.4%) ▲'제주도' (2.2%) ▲'충청북도' (2.0%) ▲'경상남도' (1.8%) ▲'경기도' (1.5%) 그리고 ▲'대구광역시' (0.8%)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산광역시' (-0.3%) ▲'광주광역시' (-0.4%) ▲'대전광역시' (-0.8%)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광역시' (-3.6%)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이 -2.2%로 집계되며 마이너스 대열에 포함됐다.

연령대에 따라 5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총 33만 5000명, 비율로는 1.3% 늘었다. ▲'50대'와 ▲'20대' 취업자 수는 각각 8만 1000명(0.3%), 4만명(0.2%)씩 증가했다. 반면, 30~40대는 줄어든 모습이 확인됐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0만8000명(-0.4%), 15만4000명(-0.6%)씩 감소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는 전체 시도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17.8%)였으며 ▲'제주도' (16.1%)와 ▲'충청북도' (15.8%)에서도 선전했다. 앞서 전년 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적었던 ▲'울산광역시'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률은 8.1%를 기록했다.

이와 비교해 20대 취업자 수의 경우 지역별 증감률 격차가 두드러졌다. ▲'대구광역시' (12.1%)와 ▲'충청남도' (11.0%)에서는 두 자릿수 증감률을 보였지만 반대로 ▲'울산광역시' (-15.5%)를 대표적으로 ▲'강원도' (-6.7%)와 ▲'전라북도' (-4.0%)의 경우 이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용수 기자 hys@

현대중, 대우조선 현장실사기간 연장할 듯

대우노조 반대에 산은과 협의키로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협의해 현장실사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우조선 노동조합 등이 거제 옥포조선소 출입구 6곳을 24시간 봉쇄하면서 현장실사는 당초 예정된 것과 다르게 기한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CFO·최고재무관리자), 강영 전무 등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 10여명은 지난 12일 대우조선 노조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불발돼 실사를 접고 돌아갔다. 지난 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실사를 위해 조선소 진입을 시도하다 노조 반대로 물러난 지 10일 만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협의를 거쳐 이들 동안 중요부문에 대한 축소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실사단은 또 11일 옥포조선소 인근 애드미럴호텔에서 4차 간담회를 갖자고 노조에 제안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매각절차가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회계법인 등을 통해 문서 실사,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열람을 해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장실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산업은행과 협의해 기한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실사를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강성 조합원 수십명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해양 기술관 1층 안전교육장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와 교육을 중단시켰다. 당시 교육장에는 직원과 다른 조합원 80명 가량이 교육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노조 측이 법인분할을 다룰 주총장을 봉쇄하자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한 이후 현장에서 조합원과 회사 관리자, 파업 참여 조합원과 비참여 조합원 사이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 주총을 앞두고 현중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 시도, 공장 전원 차단 등 생산 방해, 주총 이후 현장에서 관리자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고 노조 간부 79명을 고소·고발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5월 외국인 주식자금 26억달러 순유출

미·중 무역갈등에 투자심리 위축

지난달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주요국의 주가와 국제금리가 상당폭 하락했다.

다만 6월 들어서는 미국과 멕시코 간 관세협상 타결,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증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34억 6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지난해 1월(52억2000만달러) 이후가

장 큰 규모다.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이 커진 것은 채권자금이 원·달러 환율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저가 매수세 등으로 상당 규모 유입됐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자금은 60억 4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 유입세로 2008년 4월(61억5000만달러) 이후 유입폭이 가장 컸다.

반면 주식 투자자금은 25억8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순유출로 전환된 것은 지난해 11월(-1000만달러)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중 무역갈등 고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이 컸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168.2원에서 5월 1190.9원까지 올라갔다가 6월 11일 기준 다시 1180.4원으로 떨어졌다.

환율 변동성은 확대됐다. 지난달 중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전월 대비 3.5%로 4월(3.3%)보다 더 확대됐다. 같은 기간 변동률은 0.28%에서 0.30%로 증가했다.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는 양호한 외화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일 기준 -1.20%로 지난 4월(-1.38%)보다 0.1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통화스왑금리(3년)는 국고채 금리 움직임에 따라 0.95%에서 0.71%로 0.24%포인트 떨어졌다. /김희주 기자 hj9@